금융위기가 독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8년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독일 경제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금년도에 들어서서 상당한 개선을 보이기 시작했던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이 현상유지를 하는 수준에 머물더라도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취업자수의 증가와 실업의 감소 등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개선은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2009년부터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최근 독일내 인구감소 경향에 따른 취업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독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독일 정부의 노동시장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금융위기가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독일의 국내총생산(Bruttoinlandsprodukt : BIP)은 지난 2006년도에는 3% 그리고 2007년도에는

2.5% 성장세를 보였다. 성장세로 출발한 독일 경제는 2008년도 1/4분기에는 약 1.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처럼 보였다. 또한 각종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2008년 국내총생산은 1.8~2.7% 그리고 2009년에는 0.9~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1] 이러한 경제연구소들의 예측과 유사하게, 독일고용연구소(IAB)에서도 노동시장 발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2008년도에 2.25% 그리고 2009년도에 1%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바 있다.[2]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점차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독일 경제도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위기가 실질 경제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내 자동차 제조업 분야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위기상황은 관련 부품 조달 업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보쉬(Bosch)사를 비롯한 철강 주조업체들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 부문의 생산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조업단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조업단축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4]

그 외에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후퇴 및 주가하락 그리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난 및 신용경색 등은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들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확장 및 신규채용 등과 같은 기업의 의사결정들이 차후로

1) DIW-Konjunkturbarometer, Aktuelle Ergebnisse vom 14. 11. 2008. http://www.diw.de/deutsch/produkte/diw_konjunkturbarometer/26883.html#67276
2) Bach/Gartner/Klinger/Rothe/Spitznagel, Projektion 2009: Der Arbeitsmarkt tritt auf der Stelle, IAB-Kurzbericht, 13/2008.
3) 독일의 경우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가계부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효과가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을 비롯한 여타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4) 독일 사용자연합회 측이나 노동조합에서도 조업단축 실시를 통한 위기상황 대처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업단축을 통해서 기업들은 임금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Konjunktur für Kurzarbeit, 2008년 11월 4일,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10F4965148C04E57ABC072608B7A1A5F~ATpl~Ecommon~Scontent.html

미루어지거나 포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가계소비 또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경제 내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행 및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Rettungsfond)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그 실효를 거두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또한 구제금융의 실시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들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민간 경제 주체들에게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전가될 수 있어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 2008년 독일 노동시장 현황과 2009년 전망

2008년도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은 금년 상반기 동안의 지속적인 경기호황에 힘입어 취업률 증가와 실업감소라는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독일고용연구소(IAB)에서 최근에 발표한 '2009년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5] 2008년도 취업자수는 52만 명이 증가한 4,029만 명으로 이는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1.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사회보험의무 고용(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은 53만 명이 증가한 2,748만 명으로서 약 2%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08년도 평균 신고된 실업자수는 326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52만 명 혹은 13.7%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2008년의 노동시장 성과는 2009년도부터 침체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고용연구소의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0.5%가 될 경우에는 취업자수가 약 3만 명 가량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자수는 약 4만 명 가량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이와는 반대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0.5%가 될 경우에는 취업자수가 약 14만 명이 감소하고 실업자수는 약 1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연평균 근로시간은 조업단축 실시의 증가와 초과근무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약 0.5%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내 인구감소로 인해 2009년도의 잠재적인 취업가능인구도 13만 명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5) Bach/Gartner/Klinger/Rothe/Spitznagel, Aktualisierte Projektion für 2009: Internationale Finanzkrise bringt schwere Zeiten für den Arbeitsmarkt, IAB−Kurzbericht, 20/2008, S. 3 f.

〈표 1〉 2009년 노동시장 발전 전망

분야	2006년	2007년	2008년 잠정치	2008년 예상치		
				-0.5% 경제성장률	0% 경제성장률	+0.5% 경제성장률
연평균 취업자수(Erwerbstätige, 단위 : 천 명)						
전체	39,090	39,768	40,289	40,151	40,251	40,321
서독	31,884	32,425	32,873	32,784	32,865	32,921
동독	7,213	7,343	7,416	7,367	7,386	7,399
사회보험의무 고용자수(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단위 : 천 명)						
전체	26,365	26,942	27,476	27,344	27,444	27,514
연평균 실업자수(Arbeitslose, 단위 : 천 명)						
전체	4,487 (10.8)*	3,776 (9.0)	3,260 (7.8)	3,389 (8.1)	3,293 (7.9)	3,220 (7.7)
서독	3,007 (9.1)	2,486 (7.5)	2,138 (6.5)	2,274 (6.9)	2,194 (6.6)	2,134 (6.5)
동독	1,480 (17.3)	1,290 (15.1)	1,122 (13.3)	1,115 (13.3)	1,098 (13.1)	1,086 (13.0)
취업가능인구(Erwerbspersonenpotenzial, 단위 : 천 명)						
전체	44,508	44,456	44,380	44,250	44,250	44,250
서독	35,592	35,623	35,656	35,645	35,645	35,645
동독	8,916	8,833	8,724	8,604	8,604	8,604

주 : ( )안은 실업률

출처 : IAB-Kurzbericht, 20/2008, S. 7. (재요약)

동 · 서독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서독보다 동독의 노동시장 및 고용전망에 보다 더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도 취업자수 변동 예상치를 살펴보면, 서독의 경우 약 1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동독의 경우에는 취업자수가 약 3만 명 가량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가능인구는 동독의 경우 약 12만 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독의 경우에는 단지 1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2〉 2009년 평균 근로자수 현황 예상치 (0% 경제성장률 가정)

(단위 : 천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잠정치	2008년 예상치
전일제 근로자	23,208	23,122	34,414	23,689	23,556
시간제 근로자	11,283	11,581	11,903	12,151	12,250
시간제근로비율(%)	32.7	33.4	33.7	33.9	34.2
부업실시 근로자	1,958	2,067	2,228	2,368	2,449

출처 : IAB-Kurzbericht, 20/2008, S. 8.

위의 <표 2>는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0%에 머물게 되는 경우에 평균 근로자수 현황에 대한 예측치이다. 이에 의하면, 전일제 근로자수는 2007년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반면에 시간제 근로자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시간제근로 비율 또한 증가하게 되어 2008년도에 33.9% 그리고 2009년도에 34.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자들이 본업이외에 부업을 겸하는 사례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기에 따른 독일 정부의 노동시장 대책

11월 초에 독일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활성화 패키지(Konjunkturpaket)'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의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이다. 경기활성화 패키지 프로그램은 소위 '경제성장력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기본 취지로 하여 향후 2년간 공공부문 및 민간경제를 보조하기 위해서 약 500억 유로 상당의 정부 자금을 정부 투자 및 보조금 형태로 지출하는 계획안이다.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일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되어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6]

노동시장 안정화방안과 연관된 경기활성화 패키지의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노동사회부 장관이 제안했던 조업단축 급여(Kurzarbeitergeld) 수혜기간 연장방안이 있다.

숄츠 장관은 현재 6개월까지 지급되는 조업단축급여를 18개월로 연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7] 조업단축급여는 고용촉진법인 독일 사회법전 III(SGB III)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상적으로 6개월까지 지급되어 왔으며, 조업단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기능을 해왔다. 연방노동국(Bundesagentur für Arbeit)은 순임금수준의 약 60~67%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업단축급여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조업단축급여를 통한 정부보조정책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숄츠 장관은 조업단축급여 연장 계획이 금융위기가 심화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노사정 모두에게 윈윈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근로자들에게는 해고의 위험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근로자 해고시 차후에 신규 근로자들을 탐색하거나 채용해야 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조업단축급여의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이 실업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연방노동부는 조업단축급여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조업단축을 실시하지 않아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조업단축급여의 지급연장을 통해 실업을 방지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업단축급여의 연장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미래노동연구소(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의 슈나이더 박사는 조업단축에 따른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18개월이라는 기간 연장도 장기적으로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8]

6)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Staatliche Hilfen: Kabinett beschließt Konjunkturpaket, 2008년 11월 5일,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4C1930DF64364C859783F8954C51DBCD~ATpl~Ecommon~Scontent.html

7) Spiegel Online, Vorsorge für Rezession: Scholz setzt 18 Monate Kurzarbeitergeld durch, 2008년 10월 29일,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587275,00.html

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Konjunktur für Kurzarbeit, 2008년 11월 4일,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10F4965148C04E57ABC072608B7A1A5F~ATpl~Ecommon~Scontent.html

■ 맺음말

2008년 9월 중순부터 심화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예상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독일 정부는 금년도에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왔던 노동시장 성과가 위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2009년에 예상되는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자수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은 최근 독일내 인구감소 경향으로 인한 취업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09년도 노동시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장기실업자나 저숙련 근로자들에게 2009년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며,[9] 금융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침체는 서독보다 동독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KLI

9)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Konjunkturschwäche bedroht Langzeitarbeitslose, 2008년 11월 9일, http://www.faz.net/s/Rub0E9EEF84AC1E4A389A8DC6C23161FE44/Doc~E394F1689544F4BA29F176A32562B399F~ATpl~Ecommon~Scontent.html